

보도설명자료 (13. 10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비중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관련

1. 기사내용

- “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지하고 그 대신 석탄·LNG 등 다른 발전소를 짓게 되면, 전기요금은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3~5배 수준으로 오른다.(조선일보, 10.14(월))”
- “원전 비중이 감축돼 지금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3~5배 인상되면 경영부담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.(헤럴드경제, 10.14(월))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원전설비의 **현재 비중이 26%**이고, 6차 전력수급 계획상 **’27년의 비중이 27%**임을 감안하면, 연료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가 구성상의 큰 변화가 없을 것임
- 원전은 가동률이 매우 높은 발전소로서 **’01년 이후 20%대의 발전설비로도 총 발전량의 30~40%**를 담당해 옴
 - * ’12년 현재 설비용량 비중 : 원전 26%, 석탄 31%, LNG 26%
 - * ’27년 설비용량 비중 : 원전 27%, 석탄 35%, LNG 24%
- 민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’35년 22~29%의 범위에서 원전

비중이 결정될 경우에도 원전비중의 변화만으로 현재보다 급격한 요금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, 따라서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5배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02-2110-4868)

신용민 서기관(02-2110-4870)